

2015년 국정감사 중견기업 관련 이슈 정리(Ⅱ)

9월 10일 시작해 한 달 동안 진행된 2015년도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23일 대통령비서실 등 몇몇 일정이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일정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만큼 다양한 이슈와 쟁점들이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특히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법·제도의 구석구석에 인 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이분법적 인식의 높은 벽을 확인케 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중견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견기업 관련 이슈를 국회의원 발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0월 1일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언 요지

(대기업 중심 여신 관행 개선 필요성 강조)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하다. 고액 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 자금만 지원받고 있다. 자원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이 지원액 100%를 가져갔고, 해외건설과 플랜트를 비롯한 타 분야에 있어서도 지원금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국가전략산업에 지원되는 금액도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데, 대기업 비중이 2010년 85.71%에서 지난해 89.65%로 증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돌아간 지원액 차이는 27배 차이를 보였다.

2.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 10월 6일

-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언 요지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주장) '2015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분석 결과, 2013년 기준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96.5%(1천527억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 R&D 공제는 존속시키되 세액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받고 있는 대기업 공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청 종합국정감사, 10월 8일

- 김한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발언 요지

(중견기업 발전 위한 중소기업청 역할 강화 촉구) 2010년 이후 3년간 217개의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갔다. 2013년 정부가 조사한 중견기업의 성장걸림돌 규제 83개 중 겨우 11개(13.3%)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시절 160여개의 혜택을 받아왔는데 중견기업이 되고 나니 30여개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었다는 얘기다. 2010년부터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히든챔피언, WC300 제도 등을 통해 선진국의 장수기업들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작 업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중소기업청은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차라리 산업부에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만 잘 관리할 테니 중견기업 문제는 산업부 장관께서 직접 관리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